



'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 정 법】

응시번호 :

이름 :

1.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도 신뢰 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한다.
- ②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 후 3년여가 지나서 한 제재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실권의 법리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
- ③ 신뢰보호의 적용요건인 견해표명은 처분청만이 하여야 하고 보조기관은 할 수 없다.
- ④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2.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私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 농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관계
- ㉣ 한국조폐공사직원의 근무관계
- ㉤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행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다음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결 1997.2.20. 95헌바27)이다. ()안의 내용을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

- ① ㉠ 처벌법규, ㉡ 강화, ㉢ 급부행정, ㉣ 완화
- ② ㉠ 행정법규, ㉡ 강화, ㉢ 규제행정, ㉣ 완화
- ③ ㉠ 행정법규, ㉡ 완화, ㉢ 급부행정, ㉣ 강화
- ④ ㉠ 처벌법규, ㉡ 완화, ㉢ 규제행정, ㉣ 강화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허가처분의 취소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 ②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다.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②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라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③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당연무효이다.

8.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9. 행정처분의 '이유의 제시'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 ②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
- ④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 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